














〈 대선후보별 주요 공약 〉






- ' 17. 4. 26(수) 정책팀 -

분류	분류	 문재인	 홍준표	 안철수	 유승민	 심상정
중소·중견기업 정책	중소 기업부	○ 신설 - 중소기업부	○ 신설 - 중소기업부	○ 신설 - 창업중소기업부	○ 신설 - 창업중소기업부	○ 신설 - 중소기업인부
	고용 지원	○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제도 신설 - 청년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정부가 3년 지원	○ 중소기업 취업 청년 초임 2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 보장 ○ 중소기업 취업 청년, 소득세 감면 확대	○ '청년고용 보장제' 추진 -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의 80% 수준까지 상향 - 중소기업 취업 청년, 2년간 1200만원 지원	○ (가칭)중소기업고충처리 위원회' 신설 ○ 대·중·소기업 '상생 일자리 기금' 조성	○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 센터 설립
	창업 지원	○ 연대보증제 폐지 ○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도입	○ 연대보증제 폐지 ○ 5년간 20조원 창업·투자 펀드 조성	○ 연대보증제 폐지 ○ 재도전 위한 '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제도' 도입	○ 연대보증제 폐지(정책 자금) ○ 성실경영평가로 경영 실패시 신용불량 재기 지원	○ 기술유망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
	R&D 지원	○ 중소기업 R&D 지원 확대 - 임기내 현재의 두 배 수준	○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- 2022년까지 중소·중견 기업 R&D예산 10조원으로 확대	○ 국책연구기관 중소·중견 기업 전용 연구개발 (R&D) 센터화		○ 연구개발세액공제 -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,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
	기타 정책	○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 국내복귀시 우대 지원	○ 경제살리기 뉴딜플랜 - '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' 수립(예산: 약 50조원) ○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	○ 신성장산업 및 첨단 수출 중소기업 육성 ○ 중소·벤처기업 4.0스마트 센터 구축	○ (가칭)중소기업고충처리 위원회' 신설	○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 센터 설립 ○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
경제 민주화	상법 개정	○ 찬성 - 집중투표제·전자투표제·서면투표제 의무화 - 다중대표소송제·다중장부열람권·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	○ 반대	○ 찬성 - 집중투표제 의무화 - 감사위원 분리 선출·다중대표소송제 도입 - 기업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확대와 조회공시제도 개선	○ 신중 접근 필요 -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가능 - 집중투표제,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신중한 접근 필요	○ 찬성 - 집중투표제·전자투표제 의무화 - 다중대표소송제·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도입 -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-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

분류	분류	 문재인	 홍준표	 안철수	 유승민	 심상정
	공정 거래법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법정부차원의 「을지로 위원회」 구성, 일감몰아주기, 부당내부거래 등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 조사·수사 강화 및 엄벌 -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-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공정경쟁을 방해한 가해 기업의 공공분야 참여를 6개월간 제한하는 '원 스트라이크 아웃제'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 구조개선명령 도입 -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-지주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 상향 -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-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일감몰아주기 위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 금지 -동일한 기업집단 내 분리된 친족 기업 간 '밀어주기 거래' 규율 *'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' (가칭) 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기업 분할명령제·계열 분리명령제·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-순환출자 해소 -지주회사 요건 강화 -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-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 강화
	자본 시장법 (국민연금법)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스튜어드십코드 채택 -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법제화
	적합 업종 법제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·품목 고유업종으로 지정
	징벌적 손해배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화 -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화 -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화 -소비자 집단소송 도입
	금산 분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○ 금융-제조 통합금융감독 시스템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○ 금융-제조 통합금융감독 시스템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유지 	
	기타 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 도입 ○ 대기업 조세감면 제도 폐지·축소 ○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, 기술탈취, 부당 내부거래 등 철저조사 및 엄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분식회계 근절 ○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실효성 제고 ○ 이익공유제 도입. 도입시 세제혜택 제공 ○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선임 방법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광역자치단체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○ 소비자기본법 개정, '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'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벌3세 경영세습 금지 ○ 대기업 '납품단가 후려치기' 근절 ○ 원청-하청간, 가맹본부-가맹점주간 초과이익 공유제와 이익공유제 도입 ○ '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' 도입

분류	분류	 문재인	 홍준표	 안철수	 유승민	 심상정
노동	일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○ 2020년까지 3년 한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-300인 이상 3%, 500인 이상 4%, 1,000인 이상 5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○ 글로벌 청년인재 10만 명 육성 ○ 공정채용특별법 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 개선 및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○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○ 청년고용 의무 -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기업 매년 5% 이상
	임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○ 동일가치노동-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○ 포괄임금제 개선 ○ ‘성 평등 임금 공시제’ 도입 및 ‘동일 임금의 날’ 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-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 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 하도록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○ 동일노동-동일임금 실현 ○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 (최저임금 30배 이내) 도입
	근로 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○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1,800시간대로 단축 ○ 연차휴가 의무사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○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 고려, 한시적 ‘특별연장 근로제’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40시간 근무원칙(근로자 동의시만 주 12시간 연장근로 허용) ○ 연간 1,800시간대로 근로시간 단축 ○ 최소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○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 시간 보장 제도 도입 ○ ‘돌발노동’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제대로 준수 ○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 추진 ○ 연 1,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추진
	저출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장 24개월(자녀 8세 이하)간 임금삭감 없이 10~16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○ 출산 후 3개월까지 육아 휴직급여 2배 인상 (상한액 20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육아휴직 임신기에 당겨 사용 가능 ○ 육아휴직급여 2020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 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년으로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성 평등 육아휴직제’ 도입 ○ 육아휴직 급여 인상 -본인 임금대비 3개월은 100%, 9개월은 60% ○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육아휴직 사용 자녀 나이 18세까지 확대 및 기간은 3년까지 가능 ○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60%까지 상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아빠·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’ 도입 ○ 출산휴가 120일,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○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60%까지 상향

분류	분류	 문재인	 홍준표	 안철수	 유승민	 심상정
	비정규직·하도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(가칭)」 제정 ○ 상시적·지속적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 원칙 ○ 간접고용형태의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고용주 책임 법제화 ○ 용역노동자 고용승계 의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- 공공부문 ‘직무형 정규직’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○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사용하는 관행 개선 ○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책임 부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정규직 채용 금지 원칙(사유제한 규제) ○ 비정규직(간접고용 포함) 사용 총량제 검토 ○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 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 하도록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간제·사내하청·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(사유제한 규제) ○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 전환. 중소기업 단계적 시행 ○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% 수준까지 상향
4차 산업혁명	규제 방식	○ 네거티브 규제 도입 - 신산업에 최소 규제·자율 규제 원칙 적용	○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	○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	○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	
	플랫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1세기형 뉴딜정책 시행 (스마트하우스, 스마트 도로, 스마트 도시건설) ○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 인터넷망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○ 인공지능(AI) 활용 대 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관 공동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○ 인공지능(AI), 가상현실(VR), 사물인터넷(IoT) 등 신성장산업 육성 	○ 영화, 게임 등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	○ 미래산업 분야 투자 대폭 확대
	제조업 부흥	○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실현		○ 제조업+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도모	○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	○ 제조업 첨단화·서비스화
	기타 정책	○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	○ 대통령 직속 4차산업 관련 위원회 설치	○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	○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책 통합 부처 신설	○ 대통령 직속 ‘지능정보 사회자문위원회’ 구성
세제	법인세율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실효세율 : 인상 필요 -명목세율 : 비과세 감면 축소하고 최저한세율 인상후 부족시 명목세율 인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대 -기업의 R&D 역량을 강화하려면 감세정책 필요 -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실효세율 : 인상 필요 -명목세율 : 최고과표구간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실효세율 : 인상 필요 -명목세율 :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25%까지 인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찬성 -명목세율 : 25%로 인상 -사내유보금중 이자·배당·임대·양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에 10% 할증 과세

분류	분류	 문재인	 홍준표	 안철수	 유승민	 심상정
기타	가계부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-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%를 넘지 않도록 제한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부정적 LTV·DTI 인위적 강화 신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워크아웃 파산제도 확대 LTV·DTI 인위적 강화 신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LTV·DTI 강화 필요
	산업용 전기요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실화 필요 (전기료 혜택 중소기업으로 한정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실화 필요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실화 필요(전기요금 체계 개편위원회 설치)
	미세먼지·환경·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세먼지 배출량 30% 감축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, 배출부과금 강화 친환경차 보급확대 인터넷과 에너지 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‘플랫폼 기반 에너지시스템’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·중간 다양한 협력 채널 가동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’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%(연간 56만대)를 친환경차로 대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위해 물질 사용/검출된 제품 생산 기업의 영업 비밀 제한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 제도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세먼지 대응컨트롤 타워를 총리로 격상 미세먼지 대응예산 2배 이상 증액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생활용품 중 ‘위해우려 제품’ 전수조사 확대·정례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WTO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에너지 과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,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 실시 태양광산업·풍력산업 등을 녹색산업으로 지정 R&D 투자, 설치지원, 조세감면